

참여연대 토론회

북한 권력구조 개편과 조선노동당 당대표자회

일시 | 2010년 10월 7일(화) 오후 3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프로그램

참여연대 토론회

북한 권력구조 개편과 조선노동당 당대표자회

- 15:00 사회 박순성 동국대 교수,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 15:10 발표 **북한의 권력 승계와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 15:40 지정토론 이승열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
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16:30 종합토론
- 17:00 폐회

목차

참여연대 토론회

북한 권력구조 개편과 조선노동당 당대표자회

발제1	북한의 권력 승계와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이태호	5
토론1	김정은 후계자 공식화에 대한 검토와 전망 / 이승열	9
토론2	토론문 / 하태경	13
토론3	토론문 / 정육식	14

북한의 권력 승계와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¹⁾

1. 지난 9월 28일 평양에서 노동당 대표자회가 개최되어 당 규약 개정, 당 지도부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북한의 권력구조 개편과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의 개최는 북한 체제의 미래와 연관된 매우 중요한 사건임과 동시에 전 한반도 차원의 화해와 협력, 평화 정착과 통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곡점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내부토론을 진행해 왔고 이 토론회를 빌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2. 우선, 북한의 권력재편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에 바탕이 되는 기본 전제를 밝히고자 한다. 참여연대는 1) 남북관계가 무장 갈등과 대결의 역사에서 화해협력과 평화통일로 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 2) 그 과정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하여 남과 북이 서명한 주요 합의 문서에서 확인된 상호체제존중, 내정불간섭의 정신이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따라서 3) 현단계 남북관계 발전의 우선 과제는 다방면의 화해협력과 인도적 지원, 그리고 평화군축을 현실화하고 본격화함으로써 남과 북, 그리고 전한반도 차원에서 민주적인 개혁과 통일에 대한 준비를 촉진하기 위한 평화적 여건과 환경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이러한 인식과 판단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참여연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한반도 통일과 남북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가능하고 또 필수적인 일이라고 판단한다.
3. 다음은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이루진 권력구조 재편,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남차남

1) 대표집필: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김정은의 대장 취임 및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취임에 대한 참여연대의 기본 입장이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남과 북은 상호 체제를 존중하면서 각자의 민주주의를 심화시켜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다만 우리는 체제의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 제도라면 공통으로 지향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 있다고 믿는다. 그 중 하나는, 사회주의 혹은 자본주의를 막론하고 민주주의 사회라면 권력과 부 혹은 여하한 사회적 가치나 재화가 정당하고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대물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당성 없는 권력의 대물림은 시민(인민)의 주권을 제약하고 그들에게 차별과 불이익을 안겨주는, 민주주의의 장애물이다. 지난 노동당 대표자회의 전후 북한에서 이루어진 권력구조 변화는 비록 당원선거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하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주장하기 힘든 권력 대물림의 신호라고 판단된다. 만약 정당성 없는 권력의 대물림이 강행된다면 북한 내부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은 물론, 남북한 주민들의 화해와 협력에도 적지 않는 장애와 혼선을 초래할 것이다.

4. 다음은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에 새롭게 반영된 '선군정치'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북의 지도노선에 알가알부하려는 것이 우리의 의도는 아니지만, '선군정치'가 한반도 평화 정착과 상호군축, 그리고 비핵화에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재건과 개혁에 있어서 경제단위이기도 한 군 조직이 일정한 구실을 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북이 표방하는 '선군정치'가 현재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 내부의 개혁과 재건 과정에서 군조직의 건설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맥락을 넘어서서, 군비 확장과 군사적 억지력에 의존하는 체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군사주의의 선언이어서는 곤란하다. 북한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한 사회를 지켜내고 발전시키는 힘은 총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인민)의 자발적 의지에서 나온다.

5. 조선노동당 규약 상 당면목적 조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다. 대표자회가 당 규약 상의 당면목적에 대해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환수하는데 있다"고 규정하던 과거와 달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일부 개정된 것은 전향적이다. 또한 기존의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라는 부분을 "조선노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로 수정한 것도 전향적인 변화이다. 앞 선 두 문구는 남한체제를 식민지 통치로 규정하고 여기에 인민민주주의라는 특정한 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북한 조선노동당의 당면목표로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 왔고, 이는 '체제존중'을 주장해온 북한 자신의 원칙과 입장에 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당 규약의 일부개정에도 여전히 남한체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개입적 요소가 온존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민주주의 사회를 주체적으로 건설해가는 남한 시민의 주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다.

6.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는 66년 10월 2차 당대표자회 개최 이후 44년 만에, 그리고 80년 10월 6차 당대회 이후 30년 만에 열린 매우 중요한 정치행사이다. 조선노동당의 판단과 정책결정은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은 물론, 한반도 화해와 평화의 많은 의제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당대표자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당 기구의 보강과 충원이 남북관계의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부기附記〉

1. 북한의 변화를 포함하는 남북관계의 변화, 그리고 전체로서 한반도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큰 맥락에서, 북한 정부와 주민들이 담당해야 할 몫에 비해, 지금은 남한 정부와 시민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이 점에서 남북관계에서 남한 정부와 시민사회가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인식과 접근원칙을 합의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서 북한 권력 개편 과정에 대한 비판을 넘어 남북관계의 장기적 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남한 정부와 시민사회가 성찰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2. 우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쌀 지원이 인도적 지원에서 배제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수해복구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된 쌀 5000톤으로는 부족하다. 한 해 평균 100만톤의 식량이 부족한 북의 사정으로 고려하여 과거 제공되었던 40만톤 이상의 쌀 지원이 재개되어야 한다.
3. 둘째, 남한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이 대남적화의를도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남한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론, 작전계획 5029, 비상통치계획 「부흥」 같이 흡수통일론에 입각하여 유사시 휴전선을 넘어 북에 정치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나아가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이 내포한 공격성은 상대방을 정치군사적으로 자극함으로써 도리어 핵과 같은 비대칭 억지력 형성을 추구하는 군사주의를 부추기고 체제 내부를 더욱 극단적으로 단속하는 정치적 동기를 제공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남한

정부와 군이 지닌 급변사태 계획 및 작전계획은 국제법 국내법 어디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나 시민사회, 언론 어디서도 이에 대한 충분하고도 진지한 비판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전면전을 감행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남한의 군대가 휴전선을 넘어 주둔하거나 점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4. 셋째, 남한의 군비투자에 대한 재검토가 필수적이다. 북의 선군정치노선과 북의 비대칭적 위협에 대해 비난하고 경계하는 주장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 주한미군과 미국이 제공하는 핵/미사일 우산을 제외하고도 북한의 GDP에 상당하는 군사비를 사용하는 남한의 군사주의가 야기하는 상대측에 대한 위협에 대한 자성적 평가는 우리사회에 부족하다. 북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남한과 주한미군의 군사력이 상대방에게 가하는 위협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성찰이 없는 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기대할 수 없다.
5. 마지막으로 대결적이고 우월주의적인 접근은 문제해결을 방해한다. 대결적이고 우월적인 자세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적대를 목적으로 인용되는 '민주주의', '인권'은 힘도 설득력도 지닐 수 없다. 금세기 초 미국이 이른바 '실패국가'들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그 사회에 민주주의를 확산하겠다는 우월적이고 패권적인 태도로 정치군사적 개입을 시도했다가 해당국가와 국제사회에 얼마나 많은 폭력과 갈등만을 확산시켰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전 한반도를 평화롭고 민주적인 공간으로 변혁할 수 있는 역량은 상대방 체제가 가진 약점을 비난하는 일방적이고 자족적인 냉전적 접근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체제를 민주국가, 평화국가, 복지국가로 만들어나가려는 남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성찰적이고 평화지향적인 의지에서 나온다. 한반도 정세는 남한 정부와 시민사회가 궁지에 처한 분쟁상대에게도 공정할 수 있는지 나아가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는지를 시험할 것이다. ※

김정은 후계자 공식화에 대한 검토와 전망

이승열 /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9월 28일 당대표자대회를 통해 김정은 후계체제가 공식화 되었다.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직책에 선출됨으로써 김정은은 김정일 선군사상의 계승자로서의 정통성을 확립하였다. 김정은과 함께 리용호 총참모장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됨으로써 과거 김일성-김정일 사이의 오진우와 김정일-김정은 사이의 리용호리는 후계구도의 권력 관계를 그대로 모방하였다.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직 임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김정일 후계자 등극 과정과 비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은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당중앙군사위 3대 권력에 모두 선출되었다. 김정은의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직 선출은 1980년대 김정일의 후계자 공식화와 맥이 닿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큰 차이점은 김정은에게는 1973,4년 전원회의를 통해 김정일이 조직지도부 부장 겸 비서, 선전선동부 부장 겸 비서에 임명됨으로써 권력을 내면화할 수 있는 '내정'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점이다. 즉 권력의 내면화 과정의 필수인 조직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군에 대한 의사결정기구인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직에 임명됨으로써 과연 후계체제를 제대로 확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김정은이 후계체제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수령의 후계자로서 '정통성'을 확립해야 한다. 김정일은 자신의 후계자로서 정통성을 '능력'에서 찾았다. 수령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덕성 그리고 인민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초인적인 능력을 갖춘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고, 일면 성공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자신의 후계구도를 김정일에 의해 만들어지는 권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만경대와 백두를 잇는 '혈통'이 후계자 정통성의 핵심이 되었다. 김정일이 중국방문 기간 동안 김일성 혁명사적지를 집중적으로 방문한 것 또한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잇는 3대 세습의 적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또한 노동당 규약에서 공산주의 건설을 삭제하고 조선로동당을 '김일성 당'으로 규정한 것은 김일성의 혈통이 아니면 북한의 지도자로 나설 수 없음을 공식화 한 것이다.

둘째, 후계자의 조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조직공간을 갖춰야 한다. 김정은의 후계자로서 맡은 조직공간은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직책이다. 과연 당중앙위 부위원장이 후계자가 자신의 조직체계를 만들기에 적당한 곳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계자 중심의 조직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① 후계자 조직공간은 전국적이 조직을 갖춘 실무부서이어야 한다. 후계자가 자신의 권력을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중앙, 지방, 당과 군, 정부에 대한 인사권과 검열권 그리고 보고권을 모두 후계에게 집중시켜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후계자의 조직공간은 광범위한 조직망과 인력이 필요하다. 북한에서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당조직지도부와 국가안전보위부, 총정치국, 인민보안성 등 매우 제한적이다. ② 후계자에게 충실한 엘리트들을 후계자가 직접 자신의 주변에 집중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후계자가 자신의 조직공간에 대한 인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중앙군사위의 위원장은 김정일이다. 따라서 당중앙군사위의 엘리트들은 후계자의 엘리트가 아닌 여전히 수령의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③ 후계자 중심의 규율이 완성되어 한다. 김정일은 후계자 중심의 규율을 완성하기 위해 '당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과 이를 내면화하기 위한 당생활총화를 전당, 전군, 전국적으로 실행하였다. 김정은이 조직공간을 통해 권력을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중심의 규율을 당과 군, 인민대중에게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후계자에 대한 인민대중의 자발적 지지를 확립해야 한다. 과거 집단주의 체제하에서 배급제가 완벽하게 시행되었고, 무상교육과 무상의료가 이루어지던 당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권력이양은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한다"는 집단주의적 가치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었다. 김정일도 이러한 집단주의적 가치를 통해 '지도와 대중의 결합'이라는 주

체사상의 사회역사적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후계체제에 대한 인민대중의 자발적 지지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김정은의 후계체제는 이미 집단주의적 가치가 사라지고,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배급제의 붕괴,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당이 아닌 스스로 먹고살아야 하는 현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후계자에게 자발적 지지를 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인민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앞에 놓인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대표자 대회에서 나타난 북한 권력의 변화

현재 모든 권력의 중심이 마치 김정은이 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김정은의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직책은 권력의 내면화 과정이 없는 선군정치의 계승자로서의 '상징성'만 부각된 측면이 있다. 당대표자 대회이후 나타난 권력 변화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보다 장성택에게 권력 집중 현상이 더 분명히 나타났다. 장성택은 이미 당대표자 대회 직전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승진되었고, 이번 당대표자 대회를 통해 정치국(후보위원), 당전문부서인 행정부장(재임명), 당중앙군사위 위원에 임명됨으로써, 정치국과 당전문부서장, 당중앙군사위, 국방위원회 등 북한의 모든 권력기관에 장악력을 갖게 되었다. 이외도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가 인민군 대장칭호와 함께 정치국 정위원, 당경공업부장직에 재임명되었고, 장성택의 최측근인 최룡해가 정치국 후보위원, 비서국, 당중앙군사위 위원에 임명되었고, 또한 그의 측근인 우동축(정치국, 당중앙군사위원), 박도춘(비서국) 등이 모두 중앙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둘째, 리용호의 등장이다. 김정은과 함께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오른 리용호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과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을 밀어내고 군부의 최고 실력자로 등장하였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군단장급인 평양방어사령관은 지냈지만 김정은의 권력 승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3월 총참모장에 임명되었고, 대장으로 승진한지 1년 5개월 만에 차수로 승진한 리용호는 무엇보다 김정은의 후계체제를 뒷받침 하는 군부의 실력자인 셈이다.

따라서 장성택은 김정일이 김정은의 후계체제의 전 과정을 지켜주지 못하고 사망 혹은 유고

가 발생한다면, 김정일과 김정은을 잇는 과도(Transitional)권력의 중심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정일과 김정은을 잇는 혁명과업의 완수”라는 명분으로 등장하게 될 과도권력은 결국 장성택과 군부의 리용호의 타협 및 권력 투쟁을 통해 진행 방향이 결정 나게 될 것이다. 결국 김정은 후계체제의 성공과 실패 또한 엘리트 중심의 과도권력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결정나게 된다. 김정은 후계체제가 불안정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토론 2

토론문

하태경 / 열린북한방송 대표

토론 3

토론문

정육식 /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blog.peoplepower21.org/Peace